

금융당국, 은행 금리경쟁 자제 요청... “대출 부담 줄여야”

예금 경쟁 지속... 대출금리도 경중 시중자금 빨아들이며 유동성 악영향 은행권, 건전성 규제 추가완화 건의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에 급제동을 걸었다. 수신금리 인상이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높은 금리를 찾아 은행권으로 돈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14년 만에 5%대를 돌파하면서 시중자금을 대거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은 결국 대출금리를 끌어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중은행 예금 5%대 돌파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5%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은행권 정기예금(12개월) 상품 39개 중 9개 상품의 최고 금리가 5%를 넘어서면서 은행권에는 보름동안 13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다.

이날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정기예금 잔액은 821조54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808조2276억원) 대비 보름 동안 13조



예금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시중은행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영업 창구. /뉴스

319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이달 말에는 3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지난 8월(30조6838억원) 이후 3개월만이다.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만 166조6107억원 늘었다. 지난해 증가 규모(40조5283억원)를 훌쩍 상회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금리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은행권이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증권사, 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등으로 가는 돈 길이 막혔다.

◆금융당국 “인상 경쟁 자제해야”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 영향뿐 아니라 은행권의 예적금 수신금리 인상과 은행채권 발행 폭증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과도한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의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뒤따라 인상되기 때문에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예적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결국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은행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이 가운데 저축성 수

신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오르게 된다.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로,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은 7%대로 올랐다.

이런 상황속에 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시선도 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은행의 올해 1~9월 이자이익은 4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 총이익 42조3000억원(이자이익+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중 이자장

사인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으로 벌어들이는 이자이익이 96%를 차지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구조는 은행의 자체 자금조달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비용은 예·적금 수신금리와 은행채 발행이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예금 확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은행권은 건전성 규제 추가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당국이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이 심화되면서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까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시장점검 실무TF 회의에서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 완화를 추가로 건의했다.

NSFR은 1년 이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조달 자금을 은행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유동성 비율 규제 예외 등 은행의 자금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다”며 “은행권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초 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소득 불확실... 부채 증가... 경기완충기능 ↓ “기존 사업 시너지 기대... 다각화 성과 좌우”

한은 BOK 보고서

베이비붐 이전·MZ세대 소비 감소 “자산형성 위한 금융 문해력 교육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베이비붐 이전(1941~1954년생)세대와 MZ세대(1980~1995년생)의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경기완충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이들 세대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득 및 자산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1일 ‘BOK경제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행태 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영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통상 소비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진폭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큰 폭으로 위축하면서 경기완충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어떤 세대의 소비행태 변화가 가계소비의 경기동행성을 야기했는지 분석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행태의 변화를 ▲베이비붐 이전세대(1941~1954년생)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 ▲X세대(1965~1979년생) ▲MZ세대(1980~1995년생)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소비줄며 경기완충기능 약화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비가 증가하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전경

면 경기완충기능이 작동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비 증가율과 GDP 성장률은 경기순환주기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가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며 경기완충기능이 작동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며 경기완충기능이 약화됐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6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컸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가계소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0년대에는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49.4%다.

◆MZ세대 중심 소비감소... 경기회복 지명타

분석결과 주로 베이비붐 이전세대(1941~1954년생)와 MZ(1980~1995년생)세대의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경기완충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베이비붐 이전세대와 MZ세대

의 선택 소비재가 줄면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선택 소비재는 외식비, 차량유지비, 교양 오락비, 통신비, 내구재 등이다. 이와 달리 필수소비재는 식품과, 음료 등 생활유지를 위해 항상 소비되는 필수품을 말한다.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산 축적비중이 낮고, 은퇴로 인한 소득이 불확실해지면서 선택 소비재를 줄였다. MZ세대는 소득 및 자산기반이 취약해지고, 부채 등이 증가하며, 선택 소비재를 줄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봤을 때 향후 이들을 통해 경기 동행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MZ세대의 경우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해 필수 소비재를 절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 및 자산기반이 취약해질수록 선택 소비재까지 감소하게 되면 소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완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베이비붐 이전세대와 MZ세대의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소득, 자산 및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최 연구위원은 “소비의 주력세대인 MZ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득 자산기반이 취약한 MZ세대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MZ세대의 건전한 소득, 자산형성을 위해 적절한 금융 문해력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바이오에 공들이는’서 계속

해당 합자법인에 오리온홀딩스와 산동루강의약은 각각 65%, 35%의 지분을 투자했다. 오리온홀딩스는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을 발굴해 중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합자법인이 중국 내 임상 및 인허가, 생산, 판매를 맡기로 했다.

최근 오리온홀딩스는 이사회를 열고 신규 자회사인 오리온바이오로직스의 설립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오리온바이오로직스의 주요사업은 의약품, 소비재, 식품원료 개발 및 판매다. 다만 자회사의 회사명은 법인 설립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허인철 오리온 부회장은 취임 당시 ‘4대 신사업’으로 디저트, 간편대용식,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4가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바이오 사업 강화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오리온은 이번 자회사 설립에 따라 전문 인력 영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 측은 “오리온바이오로직스 설립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삼양그룹은 화이트바이오(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 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 소재인 이소소르비드 공장을 국내 최초로 준공했다. 이소소르비드는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을 화학적으로 가공한 소재로, 석유에서 추출하는 기존 화학 소재를 대체해 플라스틱, 도료 등의 생산에 쓰인다. 친

환경·바이오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ESG경영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 화이트 바이오 소재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는 울산에 스페셜티 소재 전용 공장을 짓고 난소화성탈도텍스트린, 프락토올리고당을 생산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적인 이유는 사업을 다각화해 국내외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바이오 사업은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성과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소소르비드 생산공장

/삼양이노텍